

## 견어찬 人材가 ‘비수’로 돌아온다면

### 태평로

### 임민혁

국제부장



중국이 지난달 전승절 열병식에서 선보인 잉지(鷹擊·YJ)-21, 동풍(東風·DF)-26D는 미국을 겨냥한 극 초음속 무기다. 대함 미사일 잉지-21은 ‘항모 킬러’, 중거리 탄도미사일 동풍-26D는 ‘팍 킬러’라고 한다. 지난주 중국 관영 매체는 이 무기들의 개발 과정을 소개하면서, 20년간 극초음속 기술 한 우물을 판 베이징대 석학 황린 교수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황린의 스승이 중국 ‘양탄일성(兩彈一星·원자폭탄, 수소폭탄, 인공위성)의 아버지’ 소리를 듣는 ‘국민 영웅’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첸쉐선(錢學森) 이 이름 석 자는 중국 군사·과학 굴기(崛起)를 논할 때 빠짐없이 등장한다. 첸의 스토리가 더 극적인 것은 그가 중국의 영웅이기 전에, 미국 탄도미사일과 우주개발의 선구자였기 때문이다. 미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고 미국 시민이 되길 원했던 천재 과학자가, 미국에서 버림받고 결국 미국을 위협하는 ‘비수’로 돌아온 과정은 지금 봐도 시사점이 크다.

상하이 출신인 첸은 스물네 살이던 1935년 미국으로 건너가 MIT를 거쳐

칼텍에서 항공역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당대 최고 항공역학 권위자 폰 카르만의 지도로 로켓 개발팀에 합류해 2차 대전 때 미군 무기 개발에 큰 공을 세운다. 탄도미사일 유도 기술, 고체 연료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 그가 원자폭탄 개발 ‘맨해튼 프로젝트’와 나치 독일 과학자 심문에 참여한 것은 미 정부의 신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첸도 미래를 위해서는 소련이 아닌 미국이 우주개발을 주도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로켓 개발에 몰두했다. 이런 노력은 미국 ICBM 및 달 탐사 로켓 개발의 초석이 됐다.

미국서 쫓겨난 中 천재 과학자 그 제자들이 美 위협 무기 개발 ‘정치에 휘둘린 과학’의 후과 트럼프 미국만의 문제 아니다

하지만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되고 미국에 반공 매카시즘 광풍이 불면서 모든 게 바뀐다. 1950년 6월 첸은 공산주의자로 몰려 FBI에 체포됐고, 이후 5년 동안 가택 연금을 당한다. 이런 소식을 들은 마오쩌둥은 6·25전쟁 때 포로로 잡은 미군 조종사 11명과 첸을 교환하자고 제안했다. 1955년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자 첸은 “다시는 미국 땅을 밟지 않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중국으로 돌아간 첸은 마오의 전폭

적 지원 아래서 중국 군사·과학기술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렸다. 중국 과학원 역학연구소를 창설한 그는 탄도미사일과 핵 개발 총책임을 맡아 원자폭탄(1964년)·수소폭탄(1967년)을 잇따라 개발하고, 1970년 인공위성 발사까지 성공했다. 중국이 초강대국 도약 기틀을 다진 것은 이때다.

중국 공산당은 첸을 국가 영웅으로 추앙했고, 수많은 젊은 인재가 그를 따르겠다고 이공계로 투신했다. 이 ‘첸쉐선 키즈’는 각종 우주 발사체, 탄도미사일, 핵잠수함 개발에 성과를 내고 있다. 극초음속 무기의 황린도 그중 하나다. 만약 첸이 미국에 남아 있었다면? 인류 최초 인공위성은 소련이 아니라 미국이 쏘아 올렸을지 모른다.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넘보는 것도 상당 기간 늦춰졌을 가능성이 크다.

미·중 경쟁의 최종 승자를 놓고 미국에 베팅하는 많은 사람은 그 근거로 전 세계 우수 두뇌를 빨아들이는 미국의 열린 교육 시스템을 들곤 했다. 심지어 중국 인재들도 자유로운 연구가 보장된 미국으로 가길 원했다. 하지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적대적 이민 정책은 ‘자국민 일자리’를 이유로 중국 및 해외 인재 유입을 막고 있다. 이렇게 미국이 견어찬 인재 중 미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제2, 제3 첸쉐선’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 정치 논리가 과학을 흔들 때 후과는 이렇게 치명적일 수 있다. 우리도 새겨봐야 할 부분이다.



‘뉴턴 철학 원론’의 서문 삽화. 1738년, 종이에 인쇄, 약 37×27cm, 오를라호마 대학 도서관 과학사 컬렉션 소장.

사틀레였다. 두 사람의 협업은 프랑스 계몽주의의 문을 열고 근대 과학 발전의 토대를 놓았다.

이후 뒤 사틀레는 뉴턴의 ‘프린키피아를 라틴어에서 프랑스어로 번역하며 방대한 주석을 달았다. 이는 오늘날까지도 ‘프린키피아’의 유일하고 완전한 프랑스어 번역본으로 인정받으며 프랑스 학계 표준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출판은 뒤 사틀레 사후에 이루어졌다. 집필을 마친 직후 그녀가 출산 중 사망했기 때문이다. 볼테르는 “나의 세계가 어두워졌다”고 탄식했다.

포스텍 교수·서양미술사

### 볼테르에게 과학을 비춘 여인

1738년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와 수학자이자 물리학자 에밀리 뒤 사틀레가 함께 저술한 ‘뉴턴 철학 원론’의 서문 삽화다. 데카르트의 형이상학이 지배하던 프랑스 학계에서 실험과 수학을 중시한 영국인 뉴턴을 지지하는 일은 위험했다. 실제로 볼테르는 1734년 출간한 ‘철학 서한’에서 영국의 종교적 관용과 언론의 자유, 과학적 실험 정신을 상찬하고 프랑스 정부를 비판했다가 혹독한 탄압을 받았다. 그때 볼테르에게 안전한 도피처를 제공한 게 바로 뒤 사틀레다. 정부의 체포령도 후작 부인이던 그녀의 높은 신분과 파리에서 멀리 떨어진 그녀의 쉼터성(城)을 쉽게 넘지 못했다.

삽화 속에서 볼테르는 책상에 앉아 집필에 몰두하고, 하늘 위에는 천체구에 컴퍼스를 든 뉴턴이 신처럼 떠 있다. 여신의 모습을 한 뒤 사틀레는 거울을 들고 뉴턴의 머리 위에 서 내려오는 지식의 빛을 굴절시켜 볼테르의 책상을 환히 비춘다. 실제로 뒤 사틀레와 볼테르는 쉼터성에 실험실을 꾸려 수년간 뉴턴의 광학과 중력 이론을 함께 연구하고 검증했다. 문학과 철학에 치우쳤던 볼테르에게 복잡한 수학과 물리 이론을 쉽게 이해하도록 가르쳤던 실질적 스승 또한 뒤

## 社 說

### ‘4심제’ 민주당 폭주, 정말 李 재판 때문인가

민주당 사법개혁특위가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사법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지금의 대법원 구성을 완전히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재판소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헌법재판소에서 뒤집을 수 있게 된다.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은 사법 시스템의 골간을 바꾸는 일이다. 특히 사실상 ‘4심제’가 될 가능성이 큰 재판소원은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는 중대한 문제다.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사법부의 의견도 반드시 들어야 한다. 역대 정부의 사법 개혁도 대법원 참여 없이 이뤄진 적이 없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동안 제대로 된 공청회는 고사하고 당사자인 사법부 의견도 제대로 듣지 않았다. 정략적 목적이란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

논의 과정부터 그렸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에 큰 관심을 보인 적이 거의 없다. 그러다 대법원이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유

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완전히 바뀌었다.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에 임명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비판이 커지자 이를 철회하고 26명 증원으로 바꾼 것이다. 재판소원 도입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동시에 밀어붙였다. 모든 게 이 대통령 재판과 관련돼 있다.

대법관 12명을 증원하려면 중견 판사 100여 명을 재판연구관으로 대법원에 파견해야 한다. 이는 사실상 대형 지방법원 1개가 없어지는 셈이어서 가뜰이나 심각한 1:2심 판결 지연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재판소원 도입도 마찬가지다. 지금 대법원이 처리하는 연간 4만건의 사건 중 상당수가 한재로 넘어간다면 관련 국민은 ‘소송 지옥’에 빠진다. 문형배 전 한재소장 권한대행이 “신속 재판을 위해 대법관을 늘리자면서 재판을 더 늦출 재판소원을 도입하자는 것은 모순”이라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법원이나 한재 구성을 바꿔 사법부를 정권 하부 기관처럼 만든 나라들이 있다. 그 나라들을 민주국가라고 부르지 않는다. 민주당은 폭주를 멈추고 사회적 합의 과정을 시작하기 바란다.

### 민 특검 “위법 없었다”지만 의문 여전, 소명 못 하면 물러나야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과거 김 여사와 같은 종목의 주식에 투자했다가 상장폐지 직전 매각해 1억 여원 차익을 거둔 데 대해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이 없었다”고 했다. 이 의혹과 관련해 처음 입장을 밝힌 것인데, 위법이 없었다고만 할 뿐 구체적인 소명은 없었다. 민 특검은 “개인적인 일로 인해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특검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피의자와 수사 책임자가 같은 주식을 부당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지만 특검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민 특검 해명에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한둘이 아니다. 민 특검은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08년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태양광 업체 네오세미테크 비상장 주식 1만주를 보유 중이라고 신고했다. 이 회사는 2009년 상장돼 한때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13위까지 올랐으나 2010년 회계 부정으로 상장폐지됐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소액 주주 7000여 명이 4000억원대 재산

을 날렸지만, 민 특검은 거래 정치 직전 팔아 역대 차익을 챙겼다. 민 특검 측은 “지인 소개로 주식을 샀고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팔았다”고 했다. 하지만 이 회사 대표는 민 특검의 고교·대학 동문 오모씨였다. 정보를 미리 들은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팔 때는 더 의문이다. 대표 오씨는 상장폐지 직전 자기 소유 차명 주식을 20여 억원에 팔았다. 민 특검도 내부 정보가 없었다면 이런 절묘한 매도가 가능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특검은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이 회사 투자 배경을 물었다고 한다. 문제의식이 있다는 뜻이다. 국민도 민 특검에게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특검 수사의 신뢰성을 위해서라도 해당 주식 매수를 권유한 지인, 매도를 권유한 증권사 직원이 누구인지 정확히 밝히고 거래 과정도 소상히 해명해야 한다. 그러지 못한다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옳다.

### 대통령은 역사를 개인 시각 아닌 사실로 평가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여순 사건’ 77주년을 맞아 비극의 시작인 국방경비대(국군 전신) 14연대 반란에 대해 “부당한 명령에 맞선” 행위라고 했다. “1948년 10월 14연대 장병 2000여 명이 제2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역사적 사실을 잘못 알고 있거나 외면한 언급이다.

당시 김일성과 남로당은 한국의 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전국에서 파업과 대규모 시위를 지시했고 제주에선 무장 투쟁까지 벌어졌다. 이미 군 내부에도 남로당원이 심각할 정도로 침투해 있었다. 14연대의 남로당원들이 제주 남로당 무장 투쟁 진압 거부를 구실로 ‘인민공화국 수립 만세’ ‘미군 철수’ 등을 내걸고 반란을 일으켜 군정, 민간인을 대거 살해하면서 시작된 것이 여순 반란 사건이다. 반란에 반대한 국군 장병부터 즉결 처형했고 무기고와 탄약고를 털었다. 여수·순천 일대를 돌며 경찰서를 공격하며 지역 유지 등을 살해했다. 유지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10대 소녀를 죽창으로 찔렀다는 기록도 있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 잔혹성은 제2 4·3 초기 남로당 폭력을 능가한다. 북한조차 남로당 세력의 초기 잔혹 행위가 반란 실패의 원인이라고 지적

했을 정도다. 노무현 정부의 진실화해위, 국방부 보고서 모두 여순 사건을 ‘14연대 반란’으로 규정한 것은 당연한 처사였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신생 대한민국에 총부리를 겨누는 남로당 무장 반란이란 이 사건의 본질을 언급하지 않았다.

당시 반란군뿐 아니라 반란 진압 군경에도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해방 직후 혼란했던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다. 억울한 희생자의 명예는 회복돼야 하고 피해는 보상받아야 한다. 이를 위한 여순 사건 특별법이 2021년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특별법은 반란에 가담해 살인, 방화를 저지른 가해자와 억울한 피해자를 구분하지 않아 반국가 범죄까지 보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 대통령은 이 특별법이 “역사를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는 것”이라고 했다.

아마도 이 대통령은 여순 사건을 계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비판하고 싶었을 수 있다. 군인들은 부당한 명령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과 남로당의 조직적인 14연대 반란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누구나 역사를 보는 개인적 시각과 취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역사를 사실(史實)에 입각해 평가해야 한다.

### 자유는 파숫꾼 뉴데일리의 새 슬로건

## 기업이 대한민국이다 ... 기업천하지대본(企業天下之大本)이다

옥중 26세 청년 이승만의 놀라운 선견지명 |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 20세 청년 뉴데일리, 새 비전 선포

【편집자 주】 조선왕조의 정치 이데올로기는 유교. 정치 체제(시스템)은 반-상-노비(양반-평민-노예) 사회계층 구조에 기반한 왕정. 경제 체제는 노예(노비) 기반의 농업 경제.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사농공상(士農工商), 충효, 반상-남녀유별** 등은 500년 이씨조선 왕국을 지탱하는 정치구조와 슬로건이었다.

이런 시스템은 내부 개혁을 원천봉쇄했다. 프랑스식 유혈혁명 또는 영국식 무혈개혁은 없었다.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망국으로 귀결됐다.

조선왕국(대한제국)이 망하기 9년 전인 1901년 4월 19일, 이승만 등이 창간한 《제국신문》 사설에 “**농자천하지대본 아니다, 상자천하지대본이다**”라는 기조의 사설이 실렸다.

평정은 지평하지 못할 지경에까지 이르니 이연고로 지금은 상업 을 불가불 천하에 큰 근본이라 할지라. 그런즉 나라의 흥망이 또 한 거기 달렸은즉 사람마다 심상히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대저 오늘날 세계 큰 싸움과 더불어 모두 이익과 권세에는 장사보다 더 큰 것이 없은즉 우리나라에서도 문명개화한다는 것은 나중 집안을 보존할 양이면 안문포록 장사길을 널리 열어서 해마다 향구에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것보다 몇천 배나 되게 하기를 바라노라.

▲ 26세 청년은 옥중에서 농업이 아니라 상업, 즉 기업과 무역만이 나라를 살릴 것이라는 사실을 썼다. 124년이 흐른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도 공감된다. 소를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말 놀랍다. © 조선일보 발간 언론인 이승만의 글 모음(1898-1944) 《몽치면 살고...》에서

주필을 맡은 청년 이승만이 감옥에서 쓴 글이다.

“...이연고로 지금은 상업이 천하의 가장 큰 근본이라, 세계의 큰 싸움이 장사 싸움보다 더 큰 것이 없은즉, 우리 나라도 장사 길을 널리 열어서 해마다 향구에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돈보다 몇 천배 되게 하기를 바라노라.” 2025년 10월 1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뉴데일리》 창간 2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다.

《뉴데일리》의 사시는 ① 자유민주주의 ② 자유시장경제 ③ 자유통일이다. 자유의 파숫꾼이다. 이날 이런 사시를 기반으로 새 비전이 선포됐다. “**기업이 대한민국이다**” **이재명** 정권은 기업의 목을 조이는 반기업 악법을 양산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이다. 124년 전 상업(기업과 무역)만이 살 길이라는 이승만의 외침이 가슴에 와닿는 요즘이다. 다음은 이영일 전 의원이 보내온 행사 참석 소감문이다.

《뉴데일리창간 20주년을 보면서》

뉴데일리는 창간 20주년 기념행사를 롯데호텔에서 개최했다. 각계각층의 하객들이 운집했다. 종종 칼럼을 기고해온 필자도 그 자리에 참석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뉴데일리가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면서 선포한 비전 구호가 뇌리에 강하게 와닿는다. “**기업이 대한민국이다**”

이런저런 행사에서 여러 인사들이 내놓는 동어반복적 메시지와는 전혀 결이 다른 구호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 비전 선포를 듣고 **고르바초프** 회고록의 한 대목



▲ 《뉴데일리 새 비전 선포》 캘리그라피 퍼포먼스에서 이성복 뉴데일리 대표(왼쪽 제일 끝)와 내빈들이 함께 하고 있다. 사진=서성진 기자 © 뉴데일리

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는 《소련이 자본주의에 진 것은 이념에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본주의 나라들처럼 기업을 만들어 내지 못한 데 있다》고 독백했다. 그는 전체주의의 이념, 즉 모든 사람의 모든 수요(every one of everyone)를 중앙기구가 완전 파악하여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망국으로서의 과오는 인정치 않고, 오로지 기업을 만들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고만 말했다.

**자유시장경제 원리는 기업들이 이룩한 발전의 성과를 한 데 묶어, 국력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기업 발전 없이 경제 발전은 없다.

지금 우리 역사상 최초로 등장한 이른바 진보정권이 반기업의 길을 가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야무진 결기 하나로 《기업이 대한민국이다》를 뉴데일리의 편집 방향으로 채택한 모양이다.

어려운 기업들에 희망을 주는 기사. 기업을 옥죄는 입법 조치에 대한 강한 비판 논조. 이런 편집을 전면에 내세워, 《기업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는 자명한 진리를 널리 설파하겠다는 다짐을 선포한 것으로 해석됐다.

한국 사회를 기업이 사는 국가로 만들어가는 견인차가 되기 바라는 의미에서 뜨거운 성원을 보낸다.



▲ 인보길 뉴데일리 화장이 “기업이 대한민국이다”에 관한 비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정성윤 기자

### 이영일 전 국회의원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5년 10월 20일 게재 되었습니다.

